

사회

광주지법, 양과동 의료폐기장 업체 손 들어줘

주민들 당황·허탈... 구청 항의 방문

남구청·광주시 항소 방침

법원이 광주시 남구 양과동 폐기물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해 처리시설 설치 업체 손을 들어줬다.

광주 남구청의 폐기물 건축허가 취소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며, 공익에 비해 업체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남구청과 광주시는 항소할 방침이며, 주민들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6일 주식회사 H사가 광주시 남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때까지 허가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며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전제로 내린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H사가 건축허가라는 '공적 견해 표명'을 받고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점, 건축허가를 취소해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다"고 덧붙였다.

남구청은 행정소송 결과에 반발, 항소할 방침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남구청은 2009년 8~11월 개발제한구역인 남구 양과동 한 필지에 건축폐기물 처리시설(건축면적 1040㎡)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건축면적 1127㎡)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다. 그러나 광주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 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판결을 듣고 놀라고 당황스럽다"며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비가 투입됐다"며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이후 남구를 항의 방문한 양과동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은 "대형 로펌에 의뢰해 업체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과 남구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미 패소는 예견된 결과였다"며 "항소심에서는 주민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남구 관계자는 "법원이 법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승소가 확실한 재판이라고 생각했는데, 판결을 듣고 놀라고 당황스럽다"며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관련 행정소송 결과, 업체가 승소하자 양과동 주민들이 허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 인화학교 前 직원에 '뼈' 있는 지적

"직접 가해자 아니어도 교직원이면 책임... 손배소 부적절"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교직원이었다면 책임이 있는 것이다.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가 없어졌는데, 해당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선 인화학교 전 교직원들에게 던진 민사부 부장판사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장애학생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방관'해버린 교직원들의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인화학교가 폐교조치되면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전 교직원 4명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우석을 상대로 각

각 1억5000만~3억1800여 만원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법원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변 법률전문가들에게 상의를 해봐도 좋으나 이러한 소송은 이기기 어렵다"며 "해고한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과 교직원 등의

문제로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한 차례 더 이들 교직원의 입장을 들은 뒤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면서 경찰의 재수사 끝에 가해자들이 다시 법정에 섰으며, 인화학교는 지난 2월 29일 폐교조치됐다.

한편 폐교 조치된 인화학교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상대로 이들 교직원 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두 6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청산절차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순찰차를 택시로, 주차장을 안방으로

'더위 먹은' 취객들

폭염과 열대야 속에 만취해 순찰차를 택시로, 주차장을 안방으로 착각한 취객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6일 순찰차에 탑승해 경찰을 폭행한 이모(42·중고차매매업자)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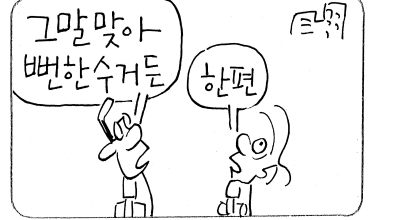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자정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 앞길에서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탑승해 박모(45) 경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만취 상태에서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해 올라탔다가 박 경사가 "내리달라"

고 말하자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은 이날 또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의사 주모(35·경북 경주시 노서동)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이날 새벽 2시10분께 서구 치평동 한 패밀리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이모(52) 경사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주씨는 이날 만취 상태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사가 잠을 깨우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618) 김종두



파프리카 보조금 14억 꿀꺽

업자·농민 등 5명 기소

광주지검 형사1부 조영희 검사는 26일 파프리카 시설 보조금 14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장모(43)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문모(52)씨 등 농민 3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업자들은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실시되는 파프리카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이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화순군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4억여원을 부

당하게 타낸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수경재배시설 보조금 지원과 관련 농민과 공모해 자부담금을 대신 납입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살비업자, 농민 등 12명을 적발해 사법처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업체와 농민들이 농가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부담금 납입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화순군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이 같은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러"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인도 생태탐방 프로그램

전남도, 무기한 연기

전남도는 무인도 생태탐방 2차 프로그램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신안군 증도면 무인도에서 중고생 2명 실종사건(광주일보 26일 6면)이 발생하자 도에서 기획한 환경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무인도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이 아닌 환경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생태탐방 프로그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경찰, 전자발찌 성범죄자 정보 '감감'

보호관찰관 등과 공유 안돼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찬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청장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10만여 명의 인력을 보유한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중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모두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

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가 경찰과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자이지만 경찰로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개한 성인 대상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 1268명,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868명 역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며 경찰에 따로 통보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 폭행 박상민 벌금 20만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영화배우 박상민(4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박씨는 2008년 1월~2010년 10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당시 배우자였던 한모씨를 밀쳐 다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가정 불화 끝에 지난해 11월 이혼.

○1심은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Japan, China, and Europe. Includes text like '무안공항 전세기 방콕파타야' and '최고의 인기 방콕파타야!!'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